

#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1년 정치

##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 “검사독재”

###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부

- 검사들, 국정시스템 장악
  - 전·현직 검사 133명, 정부요직 독차지
  - 대통령실 7명, 장·차관급 13명, 금융감독원장 전현직 검찰 출신
  - 정부인사검증시스템, 검찰 및 대통령실 검사들 장악
- 검찰권력 사유화, 법치주의 파괴
  - 대통령 중심 ‘검찰직할통치’ 체제 구축, 정적제거와 야당탄압에 올인
    - ※ 야당대표 및 前정부 수사에 윤석열사단 검사 150여명 동원
  - 대통령 본인, 가족, 검찰은 불가침 성역(聖域)
    -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윤우진 수사 무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등 수수방관
- 국민 대다수, 윤석열정부 = 검찰공화국 동의
  - 동의 61% (데이터리서치, 2022.6.29)

#### 윤석열정부 검찰출신 주요인사

구분	현황
대통령실 비서관급 7명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검사), 윤재순 총무비서관(성비위 전력, 1997년부터 대통령과 인연 맺은 검찰수사관) 등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윤석열대통령 후배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윤석열대통령 최측근 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윤석열대통령 라인검사), 김남우 국정원 기초실장(윤석열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근무) 등
정부파견 검사, 검찰공무원 113명	천재인 금감원 사모펀드 재조사TF 국장(윤석열대통령 라인 검찰특수부 검사), 우재훈 교육부 법무보좌관(창원지검 검사, 교육부직제에 없는 직위) 등

# 정당민주주의 파괴 '윤심(尹心)의힘'에 짓눌린 국민의힘

## • **법치 파괴** 당무개입

- **헌법 위반**: 정당 자율성과 정당민주주의 파괴 (제8조)
-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불가” (제57조)

## • **내로남불** 당무개입

- 윤석열·한동훈(서울중앙지검장·3차장검사), 박근혜 대통령 당무개입 기소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 • 국민 대다수, 윤석열대통령 당무개입 우려

- 동의 65% (미디어토마토, 2023.2.3)

### 윤석열대통령 당무개입 정황

개입내용	주요 발언
이준석 당대표 추출 개입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권성동대표직무대행텔레그램대화 22.07.26)
전대를 변경 개입	“당원투표 100%가 낮지 않냐” • 대통령 발언 4일 뒤 국힘 전대를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변경 (22.12.15) • 유승민 출마 포기
나경원 출마 저지 공세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자기정치에 실망했다” (대통령실, 2023.01.09.)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실, 2023.01.09.) • 당대표 출마 위해 나경원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저출산위무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해임 (2023.01.14.) • 당원 지지를 높던 나경원 출마포기
안철수 후보 공격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 보려는 사람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윤안연대 운운한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 (윤석열대통령, 2023.02.05.) “안철수는 윤심(尹心)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2023.02.)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이진복 정무수석, 2023.02.)

## 10.29 이태원참사, 무대응·무책임 정부

### • 대형 참사(慘事) 무대응

- 행정안전부·서울시 : 교통·통행 업무 부실과 불법증축 단속 소홀로 참사 초래
- 용산구청·경찰 : 10만명 이상 인파 밀집 예상에도 불구하고 참사 대비책 전무
- 대통령 경비인력 : 정부비판 집회 감시와 마약 단속에 집중 배치돼 참사 무대응

### • 대형 인재(人災) 무책임

- 윤석열대통령 : 공식적 사과 없이 관계자만 질타하고 주무장관 파면은 거부
- 이상민 행안부장관 : 국회에 위증하고 유족에 망언
- 오세훈 서울시장 : 광화문광장 참사 희생자 분향소 철거 추진

역대정부의 주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사책임 조치 여부

정부(연도)	재난명	사상규모	조치 유무	인사책임 내용
김영삼 (1994)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사망: 32명 부상: 17명	○	서울시장 경질
김영삼 (199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사망: 502 부상: 937 실종: 6	○	서울 서초구청장 파면
박근혜 (2014)	여객선 세월 호 침몰 사고	사망: 299 실종: 5	○	안전행정부 장관, 안행부 2차관 사임 감사원은 해양경찰청장 해임 요구
윤석열 (2022)	이태원 10.29 참사	사망: 156 중경상: 197	×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거부 법적조치 전무

# 언론 입 막는 고소·고발 남발 정부

## • 취임 1년 만에 언론자유 후퇴

- 회복된 언론자유지수 (박근혜정부 70위 → 문재인정부 42위)

### 다시 무너질 조짐

※ 美 국무부, MBC 관련 대통령실 언론대응을 폭력적으로 평가

※ 국제기자연맹, “언론 명예훼손 고발은 협박의 전형적 예” 평가

## • 윤석열대통령, 언론의 합리적 비판을 ‘가짜뉴스’라 싸잡아 공격

-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언론을 가짜뉴스 생산자라 맹비난

## • 감사와 수사로 보복당한 언론

- 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 총동원, 전방위적 압력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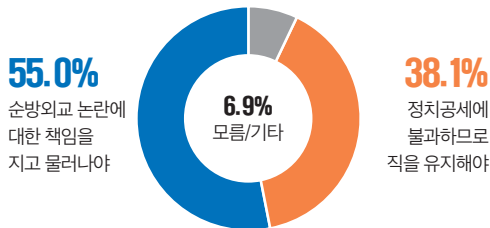
윤석열정부 1년간 언론탄압 주요사례

사안	기관
김건희 여사 관저 사전 답사 기사 관련 ‘한겨레’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
대통령관저 이전 천공개입 보도 한국일보, 뉴스토마토 고발	대통령실
‘천공 관저이전 개입설’ 제기한 김종대·김어준 고발	대통령실
대통령 욕설 MBC 보도 경위 질의 공문서 발송	대통령실
동남아 순방에 MBC 취재 제한 통보	대통령실
MBC 세무조사 520억원 추징금 부과	국세청
‘바이든 쪽팔려서’ MBC 보도에 소송 제기	외교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MBC 방문진 감사 실시	감사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 윤석열대통령, 삼권분립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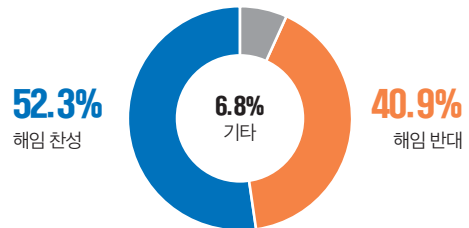
- 윤석열대통령의 **시행령 쿠데타**, 의회민주주의 파괴
  - 경찰국 설치, 검수원복, 법무부 인사장악
- 국민여론 역행, 대통령 거부권 남발
  -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
    - ※ 박진 외교부장관,尹 순방외교 논란 책임 관련 사퇴 여론 55%
    - ※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참사 관련 해임 찬성 여론 52.3%
  - **민생법안 거부**
    - ※ 윤석열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반대 여론 51%
  - **대법원 판결 거부**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 ※ 윤석열정부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 여론 53.1%

박진 외교부장관 거취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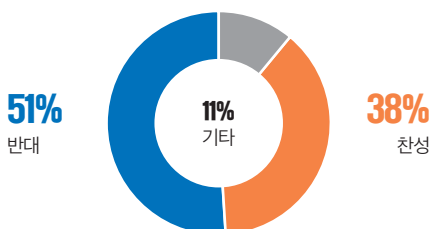
(넥스트위크리서치, 2022.10.7)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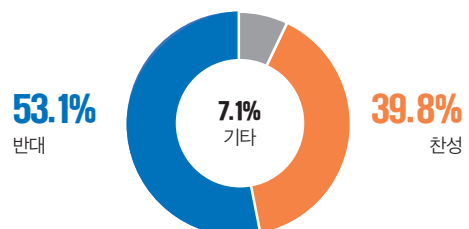
(국민일보, 2023.2.15)

양곡관리법 거부권 여론조사



(연합뉴스, 2023.4.13)

윤석열정부 강제동원 배상안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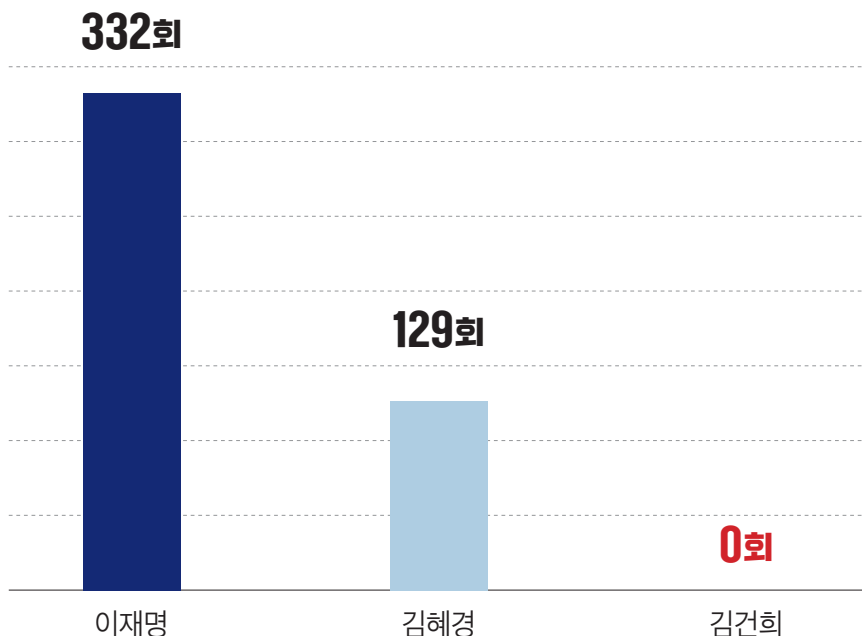


(KBS, 2023.3.9)

## 야당탄압 일관, 국가권력 사유화

- **대선정적 제거** 검찰 수사권 남용이자 공소권 남용
  - 검찰 압수수색 : 이재명 332회, 김혜경 129회 / **김건희 0회**
  - 이재명 공소장(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실명 언급 무려 140여회  
vs 윤석열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의혹은 단 몇줄에 그친 언급
  - **대통령 부부는 성역(聖域)**, 모두 무혐의
    - ※ 김건희 및 장모 사건 수사진척 없고,  
허위 학·경력 및 논문표절도 검증 불충분
- **정치보복 감사** 문재인정부 지우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코로나19 백신수급, 탈원전, 태양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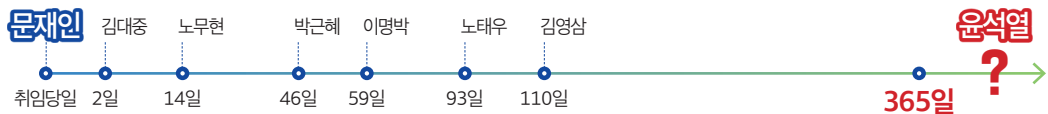
이재명, 김혜경, 김건희 압수수색 횟수 비교



# 협치포기,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 취임 1년 만에 민주주의지수 **8단계 대폭 하락** (16→24위, 이코노미스트)
  - 협치 대신 대결과 정적제거에 몰두한 것이 핵심 하락요인
- 취임 1년간 야당 안 만난 **사상 초유의 대통령**
  -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김대중대통령은 2일, 노무현대통령 14일 만에 야당 지도부 면담
  - 윤석열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만 수차례 회동
- 입에 발린 협치, 그것마저 포기
  - 취임 초기, 말로라도 협치 생색
    - ※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2022.3.10. 당선인사)
    - ※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하겠다” (2022.05.16. 국회시정연설)
  - 최근, 협치대상인 야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폄훼
    - ※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4.19 기념사)

## 역대 대통령 첫 야당 회동 시점



## 윤석열대통령과 여당의 만남

날짜	대상	형식
6.10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오찬(대통령실)
8.25	국민의힘 전체의원	의원연찬회(천안연수원)
9.14	국힘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	오찬간담회(대통령실)
10.19	국힘 원외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국방컨벤션)
11.22	윤핵관 의원 부부	초청 만찬(관저)
11.25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만찬(관저)
2023. 3. 8	국힘 전당대회	축사(고양 킨텍스)
3.13	김기현 대표 등 신임지도부	만찬(대통령실)
3.21	당 지도부, 국정자문위원 등	오찬(청와대 영빈관)

# ‘국민통합’ 아닌 ‘국민 갈라치기’ 정부

- 노골적인 편가르기, **국민분열** 조장
  - 정치보복·협치거부·소통포기·정치실종으로 정치적 갈등 심화
    - ※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은 불참, 대구 프로야구 개막전은 시구로 참여
- 사회 양극화 심화, 윤석열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 서민은 난방비·공공요금 폭탄으로 비명, 대기업·다주택자 부자감세에 환호
    - ※ 부자감세로 임기중 최대 250조 세수 감소 우려
  - 계층·성·세대간 갈등 조장, 국민 갈라치기 혈안
    - ※ 여가부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에 법·원칙 강조, 노조탄압 등
- 사라진 **국민통합** 메시지
  - 8·15 경축사, 3·1절 기념사, 4·19 기념사에서 ‘통합’ 메시지 실종
  - 야당, 언론, 시민단체 비난하는 적대적 메시지 강화
- 국민통합에 가장 게으른 정부
  - “윤석열정부, 사회갈등 해소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73.1% (한국리서치, 2023.1.25)

박근혜 vs 문재인 vs 윤석열 정부 첫해 사회갈등 해소 노력 인식조사

